

공천 룰·후보자 자격, 텃밭 경쟁 과열·논란 키웠다

민주당 광주·전남 공천 결산

- (1) 역대급 경선 잠움
- (2) 지역위원장 위상 약화
- (3) 선거 후유증 봉합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 속에 호남을 텃밭으로 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공천이 마무리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명과 교육감 1명, 기초단체장 27명, 광역의원 91명(광주 28명·전남 63명), 기초의원 320명(광주 73명, 247명)을 선출한다. 통합특별시장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포함하면 총 441명을 뽑는다. 특히 7월 출범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미래를 최전선에서 그려나가기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될 일꾼을 뽑는 만큼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텃밭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통합특별시장 경선 룰을 놓고 후보 간의 충돌부터 중대선거구 시범 도입에 따른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및 경선 방식 문제, 후보자 비위, 도를 넘은 네거티브까지 다

시민배심원제 이견...통합특별시장 경선 불참 유발 허위사실 유포·불법선거운동 의혹 속 고발전 격화 '노 컷오프' 기조, 단초 제공...“철저한 후보 검증음”

양하다. 나아가 선거 후 반드시 이뤄져야 할 후유 중 불합 등도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민주당 공천 과정의 주요 이슈를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민주당 경선은 어느 선거 때와는 확연히 달랐다. 게 지역 정가의 평가다. 과거 강도 높은 윤리 검증과 당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후보를 압축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군이 난립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잡음을 키웠다. 이는 이른바 ‘역물한 컷오프’를 없애겠다는 중앙당의 후보자격 심사 기준이 한 몫 했다. ‘예외없는 부적격’과 ‘부적격’, ‘적격’ 등으로 구분된 후보자 자격 심사 기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일부 후보들은 정치적 역학 관계로 피해를 받았다는 역

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몇몇 후보들은 중앙당 심사를 거쳐 기자회견 후 공천장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민주당 경선 잡음을 이야기할 때 공천 룰도 빼 놓을 수 없는 키워드다.

특히 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룰은 후보들 간 의견이 나뉘어 혼돈을 불러왔다.

논란의 중심에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 이후의 정경 발표와 토론을 직접 듣고 평가·투표하는 ‘시민공천배심원제’가 있었다. 조직과 자금에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와 시민의 투표권을 앗아간다는 의견이 충돌한 것이다. 후보들 사이의 유불리도 존재하면서 통합특별시장에 도전했던 일부 후보들은 경선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또 통합특별시장 경선은 ‘고발전’으로 얼룩졌

다. 예비경선 결과 발표 전후로 지역사회에 나뉠 허위 득표를 지라시, 눈속임 카드뉴스, 단일화 여론조사 역선택 유도 등 고발과 맞고발이 빚발쳤다. 경선에서는 2308건의 ARS 먹통 사태가 발생하며 의문점을 남겼고 현재 고발조치가 진행 중이다.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경선에서도 잡음이 계속됐다.

전남에서는 영광군수 후보자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공방이 격화됐다. 장성과 화순에서는 대리투표 의혹이 일었고 광양에서는 불법선거운동 등이 논란을 불러왔다.

광주에서는 중대선거구 시범 도입으로 인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난해하게 이뤄지면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북구의 경우 1~3선거구를 하나로 묶었지만 4~6선거구의 경우 5·6선거구만 묶이면서 논란이 일었다. 광산구는 비아동을 분리해 3·5선거구와 통합, 3명을 선출하는 광산 3선거구로 개편, 경선 후보자들 사이에서 유불리에 따른 불만이 표출됐다.

광역의원 경선 중에는 북구 제1선거구 1차 경선을 통과한 후보에 대한 성 비위 의혹이 일었다. 후

보 박탈 상황까지 갔으나 결국 자격 유지로 결정이 내려졌다. 서구 가선거구 기초의원 경선에서는 경선 통과자가 사퇴, 해당 자리에 경선 탈락자가 공천되면서 기준 논란이 확산됐다. 서구 다선거구에서는 위장 전입 의혹이 일면서 본선 후보로 확정됐던 후보의 공천이 취소되기도 했다.

민주당 경선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역 정가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지역 특성을 꼽는다. 경선만 통과하면 본선은 따놓는 당선이라는 선거 풍토가 과열 양상을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잡음이 많았던 이유는 속도감 있게 진행된 행정통합에 따른 공천 과정의 혼란을 꼽을 수 있다”며 “역물한 컷오프를 없애겠다는 중앙당의 기조와 전·현직 지역위원장의 계파 싸움도 준비되지 않은 후보자들을 경선 무대에 올린 것으로 이어지며 혼란을 야기한 만큼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산회 선포 뒤 의원들과 인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한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

광주 정치권, 5·18 헌법 전문 수록 무산에 국힘 ‘맹비난’

“역사의 배반자” “반민주 정당 시인” “5월 영령 두 번 우렁”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조직적 반대로 무산되자 광주 정치권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무소속 광주시의원 일동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상징,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려던 시대적 과업이, 국민의힘의 조직적 반대와 방관 속에 끝내 무산됐다”며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분노를 표하며, 역사 앞에 또 다시 죄를 범한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어제는 표결 불참으로, 오늘 은 의사진행 방해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과거 속에 가둔 국민의힘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역사의 배반자로 기록될 것”이라며 “광주 출마 국민의힘 후보들은 시민 앞에 먼저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당은 특히 “국민의힘은 개헌 내

용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 선거 운동 정략이라는 궤변으로 표결 자체를 무산시켰다”며 “좋은 내용이라면서 반대하고, 필요하다면서 표결은 거부하는 최악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들도 일제히 국힘의 행태를 비판했다.

진보당 이종욱 후보는 “국민의힘은 존재 자체가 민폐”라며 “즉각 모든 후보가 사퇴하고 당을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표결을 거부한 것은 스스로 반민주 정당, 내란 정당이라는 걸 시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후보는 “5·18 민주영령

들을 두 번 우렁하는 만행이자, 대한민국의 주권자와 민주주의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를 향해서도 “비겁한 침묵으로 12·3 내란 옹호 본색과 표리부동한 민낯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민형배 후보는 본회의 처리 무산 첫날 “오늘의 빈 의석을 기억하겠다”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참답하다”며 “개헌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니라 국민이 명령한 국회의 준엄한 책무로, 시민명령을 외면하는 정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구분기 “국익 중심 자주 정치 실현”

주한미군 철수 등 1호 공약

수시키고 전작권전통제권(전작권)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한미군기지 철수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결성과 국회 결의안 추진을 약속했다. 또 브라운 주한미군 사령관의 추방과 미셀 스틸 박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 철회, 45년간 체납된 미 대사관 임대료 1조300억원 징수를 주장했다.

구 후보는 “국회로 들어가 미국의 전쟁물적대가 아닌, 자주적 판단으로 국익을 도모하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무소속 출마 길이 열리게 됐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 8일 선거사무소에 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기한 ‘경선 후보자 명단 통보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설명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장관수 부장판사)는 박 후보가 민주당 전남도당을 상대로 낸 신청을 인용했다.

박성현 광양시장 선거 무소속 출마 자격 인정

법원, 경선 후보자 명단통보 금지 가처분 인용

박 후보는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자격 박탈 처분을 공직선거법상 ‘경선 탈락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실질적으로 경선에 참여해 선출 기회를 가진 경우에만 출마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자 처분 신청 결과를 설명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장관수 부장판사)는 박 후보가 민주당 전남도당을 상대로 낸 신청을 인용했다.

박 후보는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자격 박탈 처분을 공직선거법상 ‘경선 탈락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실질적으로 경선에 참여해 선출 기회를 가진 경우에만 출마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자 처분 신청 결과를 설명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장관수 부장판사)는 박 후보가 민주당 전남도당을 상대로 낸 신청을 인용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강성휘 “시민과 함께 새로운 변화 만들 것”

선거사무소 개소...‘원팀’ 내세워 본선 후보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강성휘 후보시장 후보(사진)가 선거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당내 ‘원팀’ 체제를 공식화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강 후보는 9일 목포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와 지역 주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고 “시민과 함께 목표의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원익 국회의원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 김산 무안군수 후보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지역 원로와 사회단체 관계자, 지지자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경선에서 맞붙었던 이호균 목포과 학대학교 총장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하면서 당내 결속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강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는 경쟁했지만 목표 발전이라는 목표는 같다”며 “민중당 원팀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는 식선 문화공연과 홍보영상 상영



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 소개, 축사, 영상 메시지, 후보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강 후보는 “이번 자리는 단순한 사무소 개소가 아니라 목표를 다시 살려내겠다는 약속의 자리”라며 “지역은 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 민생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또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 온 사랑”이라며 “돈이 도는 도시, 청년이 돌아오는 목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는 향후 정책 중심 선거운동과 시민 소통 행보를 강화하고 지역 발전 비전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는 “이번 선거는 정치가 아니라 목표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이라며 “끝까지 책임지고 일할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명창환 “어르신 체감할수 있는 행정 추진”

노인일자리·공공차집·응급의료 등 생활밀착 공약 제시

명창환 조국혁신당 여수시장 후보(사진)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여수 지역 어르신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생활밀착형 복지 공약을 강조했다.

명 후보는 이날 “오늘의 여수를 만든 분들은 산업화와 지역의 어려움을 온몸으로 견뎌낸 어르신들”이라며 “이제는 행정이 그 희생과 헌신에 책임 있는 정책으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르신은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니라 도시를 지탱해 온 주체”라며 “존중받는 노후와 안정된 삶을 위해 제각각 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을드노이 정치’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명 후보는 “나이를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중요한 것은 연령이 아니라 여수를 살릴 실력과 경험, 그리고 시민 삶을 바꾸는 실행력”이라고 밝혔다.

명 후보는 앞서 공개한 예비홍보물을 통해 어르신과 복지 분야 핵심 공약을 제시한 상태다. 주요 내용에는 대규모 노인 일자리 발굴과 확대를 비롯해 노인지역·



면·동 분회장 수당 지급, 권역별 어르신 공공차집 운영, 마을 공동행태방과 공동식당 운영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섬섬여수페이 별도 예산 확보, 권역별 파크골프장 확대 조성, 신중년 커뮤니티센터 건립, 심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명 후보는 “어르신 한 분이 편해야 가정 이 안정되고, 시민의 삶이 안정되어야 도시 도 지속된다”며 “행식적인 행사보다 생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에는 미래 기반을, 어르신에게는 존중과 안정된 노후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강한 도시와 따뜻한 공동체를 동시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